

건설동향브리핑

제473호 (2014. 8. 11)

■ 경제 동향

- 7월 CBSI, 전월 대비 3.2p 상승한 77.7 기록

■ 정책 · 경영

- 국내 건설기업 해외건설 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현황 분석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현안

■ 정보 마당

- 뉴욕시, 재산세 감면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관점의 차이가 창조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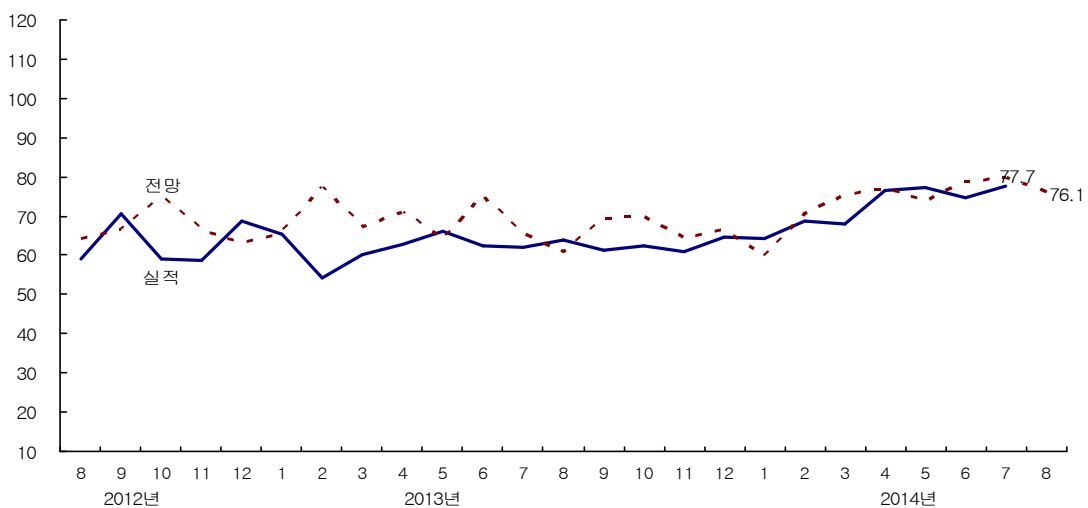
7월 CBSI, 전월 대비 3.2p 상승한 77.7 기록

- 새 경제팀 경기 부양책 발표, 시장에 긍정적 영향 -

■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침체 국면

- 2014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 대비 3.2p 상승한 77.7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9.3p 상승)하다 전월인 6월에 통계적 반락의 효과로 소폭(2.7p) 하락했는데, 7월 들어 다시 상승함.
 - 7월에 기록한 77.7은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의 77.2도 소폭 넘어서는 수치로서, 2009년 12월에 82.5를 기록한 이후 4년 7개월 만의 최고치임.
 - 통상 7월에는 흑서기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상승함.
 - 특히, 대형업체가 CBSI의 상승을 주도했고, 대형업체의 주택물량 지수가 전월 대비 30.8p나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새 경제팀의 주택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의 발표가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단,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치는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업체 및 중견업체 지수 상승, 중소기업 지수 소폭 하락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7월의 CBSI 상승을 주도하였고, 중견업체 지수도 소폭 상승했으나,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7.3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여 소폭 하락(0.6p)한 6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특히, 20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선을 회복하여 체감 경기의 개선이 대형업체에서는 크게 나타남.
 -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대형업체의 체감 경기에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5p 상승한 75.8을 기록해 3개월 만에 반등하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의 75.9를 거의 회복하였음.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3p 하락한 53.8을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음. 공공 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최근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의 발표가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1.2	62.3	60.9	64.5	64.3	68.9	67.9	76.5	77.2	74.5	77.7	79.7	76.1	
규모별	대형	85.7	84.6	85.7	92.9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100.0	100.0
	중견	50.0	51.9	60.7	50.0	67.9	66.7	60.7	75.9	74.1	73.3	75.8	73.3	72.7
	중소	45.3	48.1	32.0	47.9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3.3	52.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8월 전망치, 7월 실적치 대비 1.6p 하락한 76.1 기록

-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6p 하락한 76.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8월에는 그만큼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7월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8월에는 혹서기로 인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7월 CBSI가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의 효과도 영향을 미쳐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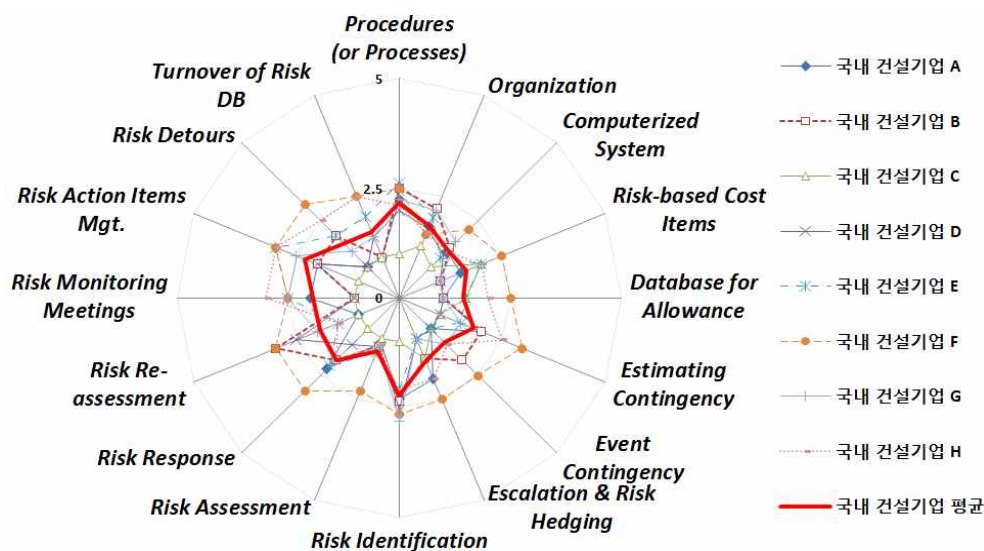
국내 건설기업 해외건설 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현황 분석

- 국내 주요 대형 건설기업의 리스크관리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1) -

■ 수주 및 수행 단계 리스크관리 역량 보강 필요

-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은 2013년에 해외건설 사업에서 약 2.85조원의 손실을 경험하면서 수주 확대와 함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영 전략의 수립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 사업 중심의 수주 단계 리스크관리 활동에 편중되어 있음.
 - 수주 사업의 특성 변화 및 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 기술 경쟁 중심의 사업 수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행 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가 절실함.
- 기업의 경영 및 수주 전략이 다양해지고 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을 통해 목표 수익의 달성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기존의 가격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체계는 계약 이후 목표 수익성의 확보 및 달성 가능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리스크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수주 및 수행 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점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필요함.

<국내 주요 대형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현황>



1) 본고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의 결과 일부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

- 리스크관리 조직/절차/시스템의 수직·수평 통합
 - 단위 사업에서 프로그램 사업까지 리스크관리의 조직과 절차, 시스템의 연속적 운영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계약 이후 사업 수행 및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리스크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은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수주 및 수행 단계의 리스크 정보와 관리 프로세스의 일원화
 - 리스크 정보의 생애주기 추적을 위해 수주 및 수행 단계에서 운영되는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수행 단계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리스크관리 인프라 역량 강화
 - 리스크관리 역량은 프로젝트관리 체계와의 효율적인 통합과 공정/원가 관리 역량이 개선될 때 향상되고, 효율성도 증가할 것임.
- 현실적인 리스크관리의 운영을 위해 기업의 내부 환경 조성 시급
 -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경영자 및 실무자를 위한 문화 확산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중요함. 또한, 리스크관리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리스크관리 활동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사업 전 수행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시급

-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 사업에서 수행 단계의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계획된 수익성의 달성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수행 단계에서 축적된 리스크 정보 및 습득 교훈(Lessons Learned)을 향후 후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글로벌 표준의 프로세스 기반 리스크관리 체계는 사업 전 수행 기간 동안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관리 체계와의 통합을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음.
 - 계획된 수익성의 달성 가능성과 사업의 리스크 변동 간의 상호 관계를 추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주 및 수행 단계 리스크관리 체계의 통합된 운영이 필수적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현안¹⁾

- ‘규제’에서 ‘진흥 및 지원’ 중심으로 전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목표 -

■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편의 배경

- 최근 국내 건설기술용역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하지만, 칸막이식 업역 체계 기반의 국내 「건설기술관리법」 하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건설기술의 정책 방향을 이전의 규제 중심에서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세분화되어 분절된 업무 영역과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함.

■ 전면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과 의의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엔지니어링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단일 업역 체계로 통합함.
 - 용역업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 크게 2개 용역업으로 정의하고,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등의 3개 전문 분야로 등록 기준을 설정함.
 -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업계가 종합엔지니어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음.
 - 이러한 단일 업역 체계로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완전한 업역 통합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건설기술인력은 기존의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감리원 등의 구분에서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의 등급도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단계로 구분함.
 -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는 과거의 학력과 경력 위주의 단순한 경과 연수에 기반한 체계를 경력, 자격, 학력,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였으

1) 본고는 정부가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2014년 5월 24일자로 시행한 의의와 현 시점에서의 주요한 현안을 정리한 것임.

- 며, 이를 위해 역량지수(ICEC :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를 도입
- 정부는 역량지수의 도입을 통해 자격증이나 학력 등의 특정 요소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학력, 자격, 경력, 교육 훈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 능력 평가를 도모
 - 기존의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개편에 따라 단일한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통합됨.
 - 이번 통합으로 그동안 별개 규정에 의해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추진력 약화의 문제를 해소하였음.
 -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시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적용·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됨.
 -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하도급의 양성화는 중소기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인정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환경을 정상화한 것임.

■ 주요 현안과 전망

-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과제 수행이 필수적임.
 - 주요 쟁점과 과제로 △기술 등급별 역량지수의 기준 점수에 대한 이해 당사 기관별 상이한 견해, △건설기술용역업자 관련 협·단체의 통·폐합에 대한 일부 갈등, △서비스 공급자 역량 제고, △새롭게 도입된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의 정상 궤도로의 진입, △기술인력 체계의 개편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자 DB의 보완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해외건설에서 국내 기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엔지니어링과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임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개편은 필수적인 개선이었음.
 - 「건설기술진흥법」은 ‘규제’에서 ‘진흥 및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국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erik.re.kr)

뉴욕시, 재산세 감면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

- 421-a 프로그램, 임대주택 공급시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 -

■ 뉴욕시, 민간 개발 위한 다양한 자원 지원

- 뉴욕시는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민간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자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 방식과 단계에 따라서는 ① 토지 확보 지원, ② 신축 지원, ③ 용도 변경 지원, ④ 부실 자산(금융적·물리적) 지원, ⑤ 취약 계층 주거 지원 등이 있음.
 - 정책 수단은 세제를 통한 자원 조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금 지원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 다양한 채널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421-a 프로그램, 신축 공동주택에 재산세 감면 지원

- 시정부가 지원하는 ‘421-a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낙후 지역 개발 및 지불 가능 임대주택의 재고 확보를 위해 뉴욕시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임.
 - 1960년대 중반부터 뉴욕시는 경기 침체, 도심지 슬럼화, 주택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민간의 주거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71년에 421-a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도입함.
 - 421-a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2005년까지 최소 11만 채 이상의 공동주택이 신축됨.
 -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감면 혜택은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2006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421-a는 특정 지역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고 단계적으로 재산세를 정상화시키는 프로그램임.
 - 개발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과세 표준 공제 방식임.¹⁾ 초기에는 공제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1채당 6만 5,000달러까지로 과세 표준의 공제 한도를 제한함.

1) 2006년 이전에는 개발 전 가격이 10만 달러, 개발 후 가격이 30만 달러인 경우, 개발 후에도 10만 달러를 과세 표준으로 선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즉, 20만 달러의 과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임. 2006년 이후에는 과표 공제 한도가 6.5만 달러로 제한됨에 따라 23.5만 달러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됨.

- 착공 전 3년 동안 용도 승인이 나지 않은 미개발지이거나, 나대지에 한해 적용함.
- 또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421-a 적용 배제 지역으로 선정됨. 배제 지역의 결정위원회가 존재하고 2년마다 재설정이 이루어짐.
- 421-a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면 최장 3년의 건설 기간 동안 재산세가 면세되고, 최장 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0년(2년은 전체 감면, 8년은 단계적 상승), 15년(11년은 전체 감면, 4년은 단계적 상승), 20년(12년은 전체 감면, 8년은 단계적 상승) 프로그램이 존재함.

■ 지불 가능 임대주택 공급시, 추가 혜택

- 지불 가능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모든 지역에서 421-a 감면 혜택이 가능함.
 - 지불 가능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421-a 적용 배제 지역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통상 5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중 1채 이상을 지불 가능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혜택을 받고 있음.
 - 10년, 20년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10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421-a와 달리 건설 이후의 재산세 증가 방식은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결정하고 있음.
 - 지불 가능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뉴욕의 중위 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과 중·저 소득층(뉴욕의 중위 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에 공급해야 함.
 - 지불 가능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기간 동안 임대료 규제를 받게 됨. 뉴욕시 임대료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의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준수해야 함.
-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인센티브인 421-b 프로그램도 존재함. 개발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표준 공제 방식은 유사함.

■ 뉴욕시, 지방세 감면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

- 뉴욕시는 임대주택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7. 31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기금과 주최, '제37차 기금운용심의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기금 금리 조정 방안 논의
8. 4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8. 5	대구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토크'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하반기 지역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토론
	주택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 정상화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정책 과제 논의
8. 6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실 주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하반기 「세법」 개정안 심의
8. 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제과 주최,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토의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과거 40여 년 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건설투자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른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전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수행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전망 방법론을 다소 수정, 보완하여 2030년 까지 국내 건설투자의 변화 추이를 전망하였음. ● 전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2020년에는 11.0~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과거에 비하여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하락 속도가 좀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 결과, 건설투자의 비중이 2025년에는 10.0~10.5%, 2030년에는 9.2~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년 동안은 0.8~1.5%, 2020~30년 동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낮은 0.6~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상의 전망치는 2020년 이후 기존 건축물 및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 투자가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출한 전망치임.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선진국과 같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함. ●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약 11%가 되고, 2025년 이후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미임. -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11%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관점의 차이가 창조력이다

우리는 매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간다. 때론 생각이 너무 달라 아예 서로 등을 돌리며 살아가기도 한다.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다른 이념의 집단들 간에는 좀처럼 화해할 수 없는 벽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반드시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새가 두 날개로 날 듯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있을 때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슬기롭게 수용하려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럴 때마다 필자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떠올리곤 한다.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자기다움 내지 자신의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 남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철학자 니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한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객관적, 절대적인 세계라는 것은 없으므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곧 진리의 세계라는 것이다. 니체가 이해한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낡음과 새로움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늘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상상력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보다 역동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요즘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는 ‘창조’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조 경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어디서 나오는가.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고정 관념의 세상에서는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새로운 상상력의 안경을 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융합될 때 비로소 창조경제는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관점의 차이가 곧 창조력의 원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건설산업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력의 발휘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인 스스로 고정 관념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2014. 6. 16>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